

이주열 “물가압력 낮아…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한은 총재)

한은 창립 68주년 기념식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 시사
일부 신흥국 금융·외환시장 불안
해외 리스크 주의깊게 살펴야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 강조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당장 올 7월과 8월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은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크지 않다”며 이



이주열 한은 총재가 12일 열린 한은 창립68주년 기념식에서 기립사를 하고 있다.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금

용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4%에 그쳤다. 통화정책 목표치인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 들어서 근원물가 증가율은 내내 1.2~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증가율 역시 올 들어 1.1~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우리 경제에 고용 및 소비의 선순환을 제약하는 각종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부진은 일부 업종의 업황개선 지연 이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다”며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 등 특정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성장을 외부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소득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를 통해 소비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미룬다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주체 간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기초경제 여건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해외 리스크 요인들이 함께 현재화될 경우 과급 효과의 향방을 정확히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윤석현 “은행 대출금리 산정 불합리”

(금감원장)

정보제공·금리공시 등 강화 당부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에 대한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의 점검 과정에서 은행의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가산금리 인하요인이 생겼지만 수년간 고점값을 적용하거나 산출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경우가 있었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상미기자

작년 금융사 내부감사로 893건 자율조치

7개 권역 221개사 자체점검
조치건수 전년비 6.6% 줄어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내부감사협의를 통해 총 893건의 자율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고, 총 893건 자율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취약한 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해 금융사가 내부적으로 감사하고, 금감원이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내부감사협의제를 도입했다.

조치건수 기준으로 제도운영 개선이 424건(47.5%)으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

〈연도별 금융회사 자율조치 실적〉

단위:건, %

연도	개선	시정	임직원 조치	주의	합계
2015년	452(37.9)	286(24.0)	399(33.5)	55(4.6)	1,192
2016년	488(51.0)	195(20.4)	208(21.8)	65(6.8)	956
2017년	424(47.5)	314(35.2)	136(15.2)	19(2.1)	893

(*) 은 구성비

한 부분의 시정 314건(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 136건(15.2%) ▲주의 19건(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감사협의제로 전 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됐다”며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금감원은 중대한 취약 부분 위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는 전년도 반복지적사항

과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총 61개 주제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미성년자 재형저축 가입, 명령휴가제도 운영 실태 등 22개 과제로 가장 많고, 보험은 불안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차매 보험 운영 실태, 보험금 지급지연 관리 등 19개 과제가 선정됐다.

금감원은 내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내부감사협의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i@

亞 5개국 펀드 교차판매 본격화

금융위 ‘亞 펀드 패스포트’ 추진

아시아 국가 간에 펀드를 자유롭게 출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한국,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시장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해당 요건은 운용사의 경우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업력 5년 이상 등이며 투자대상 자산은 증권,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이어야 한다. 펀드 자산의

20% 이상을 계열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은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의 경우 일반 외국펀드보다 국내 등록을 쉽게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일반 외국펀드 등록요건 중 운용사의 최소 운용자산(1조원 이상), 자기자본(국내 운용사와 동일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설정펀드 등의 요건을 면제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6월 중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 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국내 제도시행 전 패스포트 펀드 시험등록 등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시행해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중소형 아파트 강세… 매매값 38% 쯤쑈

(전용 60㎡ 이하, 5년 전 비)

1년간 전체 거래량의 80.62% 차지
실수요자 중심 재편에 선호도 높아

올해도 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분양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소형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한 영향이다. 매매거래가 활발한 만큼 소형 평면의 집값 상승률도 높아 청약경쟁률이 치열하다.

◆올해도 소형이 강세…선호도 高高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수도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전용 85㎡ 미만 소형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9만 7776가구로 전체 거래량(36만 9346가구)의 80.62%를 차지했다.

일례로 서울 강동구에서 지난해 3월 입주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의 경우 매매거래량 총 344건 중 전용 85㎡ 미만 소형 평면이 310건 거래된 반면, 중대형 평면인 전용 97~141㎡는 거래량이 14건에 그쳤다.

매매거래가 활발한 만큼 소형 평면



신한종합건설이 6월 분양하는 ‘김포 센트럴 헤센’ 투시도.

/포에디원

의 집값 상승률도 높다.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용 60㎡ 이하 매매가는 3.3㎡당 평균 1413만원, 전용 60~85㎡이하는 1446만원으로 5년 전(2014년 5월)보다 각각 37.59%, 31.81% 올랐다. 반면 전용 85㎡ 초과인 경우 1631만원으로 같은 기간 24.60% 상승에 그쳤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소형 평면이 대형 평면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황금산(15년 12월 입주)’ 전용 84㎡ 매매가 시세는 지난 1년간 4억 4000만원에서 4억 9500만원으로 12.5% 증가했으나, 전용 122㎡는 5억 2500만원에서 5억 4500만원

으로 3.81% 올랐다.

업계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수요자들이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고 환금성이 높은 소형 아파트에 몰렸다고 보고 있다.

청약시장에서도 소형 평면의 인기가 높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7년 5월~2018년 5월)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자 수는 총 95만 2551명이다. 이중 소형 평면에는 72만 7077명이 몰려 76.33%를 차지한 반면, 중대형 평면에는 22만 5474명으로 23.67%에 그쳤다. 10명 가운데 7명이 소형 평면에 몰린 것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